

■ 빛 공해로 인한 환경피해에 최초 배상 결정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015년 ‘빛 공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해 최초로 배상을 결정했다. 경기 군포시에서 콩과 들깨를 재배하는 농민이 철도역의 야간 조명 등으로 수확량이 들깨 85%, 콩 19% 감소한 사실을 인정받았다.

조정위는 한국철도시설공단과 한국철도공사가 신청인에게 77만원을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로 농작물 피해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향후 가로등 등 인공조명으로 농작물 피해가 생길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복지

■ 증세 없는 복지정책의 한계가 두드러진 한해

“134조5천억원의 공약가계부를 더는 지킬 수 없다. 새누리당이 반성한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임이 입증되고 있다. 정치권은 솔직하게 고백하고 세금과 복지의 문제점을 털어놓고 국민과 함께 미래 선택지를 찾아야 한다.”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원내대표 취임 이후 2015년 4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보수혁신의 가치를 내걸면서 털어놓은 솔직한 고백이다. 유 전 원내대표는 장기적 시야의 복지모델에 대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재의 ‘저(低) 부담-저(低) 복지’를 ‘중(中) 부담-중(中)복지’로 바꿀 것을 국가적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이를 위해 세금과 복지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 합의를 구를 설치해 소득과 자산 비율에 따른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고,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는 등 조세 형평성을 확립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유 전 원내대표는 이런 여당발 제3의 길을 제안하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배신자 소리를 들으며 퇴진 압박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7월 거의 강제로 중도에 하차했다.

유 전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에서 오토이 묻어나듯 2015년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집권 절반을 넘어가는 시점에서 증세 없는 복지 정책의 한계가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며,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던 복지마저 줄이는 길로 본격적으로 접어든 한해로 볼 수 있다.

세계적인 경제악화 상황에서 증세 논의에 대한 집권여당 주류세력의 강한 거부 기류 속에 세수가 걷히지 않아 정부가 실탄부족에 시달리면서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복지정책을 펴려고 해도 펼 수 없는 지경으로 내몰린 결과이다.

■ 중앙정부, 지자체 복지사업에 대한 대대적 전면조사 실시

이런 복지 후퇴 흐름은 유사 중복복지를 정비한다는 명분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사회보장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메스를 대는 조처에 나선 데서 확연하게 드러난다.

2016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나온 중앙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야당 소속 지자체와의 갈등 또는 충돌을 예고하며 정치 쟁점으로 서서히 떠올랐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4월 1일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복지사업에 대한 전면 조사에 전격적으로 착수했다.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따지고 중앙행정기관 유사 사업과의 중복성을 살펴봐서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서 어긋나거나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겹치면 정비하거나 조정하도록 적극적으로 권장하려는 목적에서다.

전국 지자체가 벌이는 사회보장사업은 1만여 개에 달한다. 복지부는 2013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이후 지자체가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사회보장제도에 대해 해당 지자체와 ‘협의’ 과정을 통해 적정성을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가 기존에 벌이던 사업을 포함해 지자체의 모든 사회보장 사업을 전수조사하기는 처음이었다.

복지부가 지자체의 복지사업을 세심히 들여다보기로 한 것은 2015년 4월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비효율적인 복지에 산을 손보고 부정적 수급을 막아 2015년 한해 모두 3조원 규모의 복지재정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로 복지정책효율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었다.

물론 복지부는 “복지축소가 아닌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고 강변했다. 하지만, 본질은 복지예산이 부족해 복지확대는 커녕 있는 복지도 손봐서 정비하겠다는 뜻이었다. 조사결과 복지부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를 지자체에 강제할 법적 근거는 없다. 복지부가 복지사업의 조정과 정비를 권하더라도 지자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럼에도, 이처럼 복지부가 무리수를 뒤 가며 복지사업 전면조사에 나선 것은 증세 없는 상황에서 더는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선언으로 읽을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복지재정 누수를 막는 다며 복지 부정수급 신고포상제를 확대했다. 2015년 10월 7일 ‘복지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그간 일부 복지사업에서만 주던 신고 포상금을 모든 복지사업에도 주기라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수당, 사회복지법인·시설·단체의 국고보조사업 등에서 부정수급 사실을 신고하면 1인당 연간 최고 5천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처럼 당근보다는 채찍 중심의 박근혜 정부 복지정비정책은 예상대로 곳곳에서 파열음을 냈다. 아우성이 터져 나왔다.

■ 지자체 복지사업 27%는 중앙정부와 유사·중복사업…지자체에 정비 압박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겨 지자체의 복지사업 5천892개를 조사한 결과, 이 중 27.0%인 1천593개는 중앙정부의 복지사업과 유사·중복되는 사업으로 분류됐다. 유사·중복 사업은 예산 비중으로 따지면 전체 지자체 복지사업의 17.5%에 해당한다. 금액으로는 1조원 가량이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이라면 적어도 중앙정부 부처의 복지사업 간에 중복되는 사업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점이다. 보사

연 연구결과, 2014년 기준 중앙정부 각 부처의 사회보장(복지) 사업은 360개에 이른다. 그러나 이 중에서 서로 '같은 대상자, 같은 목적·급여유형'을 가진 중복 사례로 판단할 수 있는 경우는 1건도 없었다.

아무튼, 복지부는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8월 말부터 2주간 각 지자체 담당자에게 조사내용을 설명하고 2015년 말까지 해당 사업을 중앙정부의 사업과 겹치지 않도록 정비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노인에게 '장수수당'을 주는 지자체와 건강보험 같은 사회보험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지자체는 해당 사업을 중단하도록 요청했다. 장수수당은 중앙정부의 기초연금과 겹치며 사회보험 본인부담금 지원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중앙정부가 시행하는 의료급여와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였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일정 연령대 이상의 노인에게 정기적인 급여를 주는 노인수당을 폐지할 것을 각 지자체에 권고했다. 노인수당은 매달 혹은 분기나 반기, 명절 때 등에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이다. 효도수당, 장수수당, 경로위생수당 등 다양한 이름으로 보통 10만원 이하의 금액이 지급된다. 전국 90여개 지자체에서 이런 노인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다.

지자체에 복지사업의 폐지를 명령할 권한이 없는 복지부는 국고보조금 삭감 등의 방법으로 지자체에 대한 압박에 들어갔다. 그러자 비명이 흘러나왔다. 중앙정부가 나서서 지자체의 복지수준을 낮추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 것은 당연했다.

복지부의 지자체 중복 복지사업 폐지 권고로 당장 미취학 아동 88만 명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던 보육료 지원을 더는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 보육교사 18만 명도 비슷한 상황에 빠졌다.

복지부가 국무총리 주재 사회보장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자체 복지사업 1천496개를 유사·중복사업으로 보고, 2015년 9월말 지자체에 자체 정비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도록 통보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목록에는 보육료 지원, 아동돌봄지원, 보육시설아동 및 시설지원, 보육교사지원 등 미취학 어린이 88만 명과 보육교사 18만 명 등 106만 명을 대상으로 지자체가 3천391억원을 투자해 시행하는 보육사업 164개가 포함됐다. 지자체가 부모의 양육부담을 덜어주려던 보육사업들이 정비대상명단에 오른 것이었다.

경기도는 생활고에 시달리는 저소득 가구의 보육료 부담을 줄여주고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5세 저소득층 아동에게 최대 6만6천원의 보육료를 지원했는데, 이 보육사업이 정부의 3~5세 누리과정 등에 대한 지원사업과 겹친다는 이유로 유사중복 정비사업 대상이 되면서 폐지위기에 맞닥뜨렸다.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지원은 월 7만원씩 담당교사의 처우 개선비와 누리과정 운영지원비로 사용되는 것으로 부모가 직접 부담하는 보육비와는 별개인데도 중복사업에 포함된 것이다.

열악한 처지의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쓰는 일부 지자체의 각종 수당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충남 서천군은 보육교사 중에서도 급여가 낮은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근무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씩 수당을 줬다. 대구 달성군은 5년 이상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의 장기근속수당을, 경남 김해시는 장애아 담당 보육교사에게 월 5만원의 수당을 지급했다.

그렇지만, 이런 보육교사 지원 지자체 사업은 중앙정부의 '어린이집 근무환경 개선비' 및 '보육돌봄서비스'와 중첩된다며 정비명단에 들어갔다. 보육교사는 하루 평균 9시간 28분을 일하면서 월급으로 155만원을 받고 있다. 이런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보육교사의 평균 근속기간은 4년5개월에 불과하다.

■ 지자체 복지사업을 둘러싼 중앙정부와 지자체 정면 충돌

중앙정부가 일반적으로 밀어붙이는 복지사업 정비조치는 지자체와의 정면 충돌을 불러일으켰다. 특히 서울과 경기 성남시 등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는 물론 새누리당 지도부까지 모두 나서 전면 공세를 펼치는 바람에 정치 이슈로 급부상했다. 양측은 사사건건 부딪치며 감정싸움으로까지 치달았다.

복지부는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5년 6월 이재명 성남시장이 무상 공공 산후조리원을 새로 세우겠다는 계획에 급제동을 걸었다.

국가가 시행 중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과 겹칠 뿐 아니라, 민간 산후조리원의 입소율이 낮아뵈더라도 지원 희망자 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반대이유로 내세웠다.

복지부는 또 12월 1일에는 경기도 성남시의 무상교복제도 신설도 거부했다. 성남시가 8월에 주민등록을 둔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내용의 무상교복 제도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고 사회보장기본법 절차에 따라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는데, 제도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재협의'를 통보하며 반대한 것이다.

복지부는 나아가 12월 11일에는 성남시의 '청년 배당'도 수용하지 못하겠다고며 반대사를 분명히 밝혔다. 청년층 취업역량 강화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불분명한 점 등 사업의 타당성이 의문인데다 중앙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 사업과 비슷하며, 자원 조달 방안도 미흡하다는 점을 들었다.

성남시는 이에 앞서 9월에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고 3년 이상 거주해온 만 19~24세 청년에게 분기당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청년 배당금'으로 지급하겠다고 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했다.

중앙정부는 성남시뿐만 아니라 서울시와도 각을 세웠다. 서울시가 11월 '청년활동 지원사업(청년수당)'을 신설하겠다고 하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이 사업이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때 복지부 장관과 협의하게 돼 있는 새로운 사회보장제도에 해당한다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한 사회보장의 정의 중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한다'는 대목을 들어 이 제도가 복지부와 협의를 필요한 사회보장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맞서며 양측은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달았다. 서울시는 해당 제도가 시혜성 복지 제도가 아닌데다 공모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논란의 대상이 된 서울시의 청년수당 제도는 정기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이면서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공모와 심사를 거쳐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월 50만원을 청년활동지원비로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 제도를 2016년부터 시행하겠다고 11월 5일 발표했다.

복지부와 서울시 간의 갈등은 복지부가 법제처에 법령 유권 해석을 의뢰하는 상황으로 격화하고, 12월 3일 법제처가 협의대상 사회보장제도라고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자, 서울시는 “법제처도 하나의 행정기관으로, 법 취지에 따라 유권해석을 해주지만 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굳혔다.

법제처는 서울시 청년수당이 현대사회의 복지국가 헌법이념을 포괄적으로 규정한 사회보장 개념에 포함된다며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12월 24일 서울시의회가 청년활동 지원비(청년수당) 관련 예산을 편성해 통과시키자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예산안결결 무효 확인 청구 소(訴)’를 대법원에 제소하고, 예산집행으로 야기되는 혼란을 막는다며 서울시 예산안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강 대 강’의 대결국면으로 치달은 것이다.

이처럼 지자체 복지사업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데도, 중앙정부는 권한강화에 나서며 복지통폐합 정책을 추진하는 데서 한 발짝도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정부는 11월 11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처음으로 직접 참석한 가운데 제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사회보장위원회 기능강화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과 지방교부금과의 연계를 통해 지자체 신설·변경 복지사업의 협의·조정 결과에 대한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며 지자체를 거세게 몰아붙였다. 지자체에 대한 자율권 침해 논란에도 돈줄을 쥐고 뜻을 관철하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9월에는 복지부와 협의하지 않으면 지출 금액 이내에서 지자체에 대한 교부세를 감액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보훈

호국 보훈

■ 6·25 참전 국가유공자 발굴

국가보훈처는 2015년 3월 7일 6·25 전쟁에 참가한 국가유공자 발굴 실적을 발표했다. 보훈처가 2014년 1월 이후 발표 시점까지 발굴한 6·25 참전 국가유공자는 모두 2천800명에 달했다.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록을 하지 못한 6·25 참전용사 발굴을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육·해·공군본부, 병무청,

행정자치부 등과 협업을 통해 참전 자료를 수집해 4만6천372명의 신상을 확인했다. 보훈처는 6·25 전사 자료 155권을 조사해 217명의 개인 공적도 새롭게 발굴하고 이 가운데 유엔군 참전용사 5명을 포함한 11명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했다.

보훈처는 6월 5일에는 6·25 전쟁 당시 여군으로 참전했으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16명을 찾아내 유공자 등록을 마친 사실을 공개했다. 보훈처가 2014년 초부터 진행해온 6·25 참전 유공자 발굴사업에서 여군이 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 따르면 6·25 전쟁에 현역으로 참가한 여군은 육군 986명, 해군 75명, 공군 26명, 간호장교 664명 등 1천751명에 달한다.

6·25 참전 유공자는 월 18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의료비 60% 감면, 주택 우선 지원 등의 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6·25 참전자 90만 명 가운데 유공자로 등록되지 못한 사람은 42만 명에 달한다. 보훈처가 미등록 참전자 5만5천376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사망자는 4만601명으로, 73.3%에 달했다. 생존자는 3천874명(7%)이었으며 본적지·거주지가 불분명한 사람도 1만901명(19.7%)이나 됐다.

■ 6·25 유엔군 참전용사 방한



▲ 10월 2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월드에서 열린 유엔군 한국전 참전용사 감사만찬에서 이진원 국방부 국군의 날 기획단장이 국방부에서 준비한 기념품을 각 국 참전용사 대표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5년에도 6·25 전쟁에 참가했던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한국에 초청해 이들의 헌신에 감사했다. 이들 가운데 4월 20일 한국에 온 영국인 6·25 참전용사 윌리엄 스피크먼(88) 씨는 영국 정부로부터 받은 무공훈장을 한국에 기증해 화제가 됐다.

보훈처의 초청으로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 영연방 4개국 출신 6·25 참전용사와 가족 등 80여 명과 함께 방한한 스피크먼 씨는 영연방 최고 무공훈장인 빅토리아십자훈장을 한국에 기증했다.

그는 “메달(훈장)이 한국의 박물관에 전시됐으면 좋겠다”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자진해서 한국에 와 열심히 싸웠다는 것을 기억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피크먼 씨는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11월 임진강 유역 마량산(37고지) 전투에서 용맹을 떨친 전쟁영웅이다. 당